

도쿄올림픽 ‘독도 日영토 표기’ 규탄 선언문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봉송 루트지도에 한국 영토 독도를 일본이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lympism)에 반하여 올림픽을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켜 성화봉송 루트지도에 포함시킨 불법행위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강력한 권고결정을 해야 한다.

올림픽 기본원칙은 제5조“올림픽 운동 내의 스포츠단체는 정치적 중립성”이 적용되어야 하며, 제6조“본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성향,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와 같은 종류의 차별 없이 확보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킨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서 어떤 종류의 차별도 금지하는 올림픽의 기본정신에 반한다.

둘째, 올림픽 조직위원회(IOC)는 이중적 편파적 행위에서 벗어나 형평성과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 IOC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간 것을 두고 일본정부의 항의를 이유로 독도 표시 삭제를 권고했고, 한국정부가 IOC의 권고결정을 수용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IOC는 한국정부의 항의를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정부에게 즉시 독도를 삭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셋째, IOC는 국제연합(UN) 헌장 전문과 제1조 국제연합의 목적이“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있으며, 올림픽 기본원칙 제2조“올림픽의 목표는 인류의 존엄성 보존과 관련된 평화로운 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

해 스포츠를 배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일본정부가 성화봉송 루트지도에 포함시킨 독도는 1905년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에 대한 식민지 획득을 위해 침략과정에서 제일 먼저 침탈한 영토가 독도이다. 따라서 IOC가 편파적으로 일본정부를 옹호하는 행위는 국제평화를 무시하고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를 옹호하는 행위로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넷째, 한국정부는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떤 일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을 반대하며,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침탈한 결과물인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침탈도 반대한다. 과거 일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가 오늘에 이르러서도 조금도 반성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사실과 한국민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사역케 한 사실을 IOC는 상기하기 바란다.

다섯째, 한국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정부의 만행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편파적인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말고 더 강력한 항의를 지속해야 하며, 또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만행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또는 대응조치 없이 도쿄 올림픽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국정부에 더 강력한 대응조치를 요구한다.

2021년 7월 9일

독도 주권수호 연합대표 일동

독도학회, 독도연구보전협회, 선문대학교 독도센터, 독도조사연구학회, 독도영토학연구소, 한국영토학회, 경일대학교 독도간도교육센터,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독도수호전국연대, 독도시민연대, 한국독도연구원, 한국이사부학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평화통일시민연대, 영토문화관 독도,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랑문학회